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원 혁신 포럼

현장에서 답을 찾고, AI로 가치를 더하다

일자 2026. 3. 31.(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집단·특이민원 혁신 포럼

부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로 가치를 더하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3. 31.(화), 14:00 ~ 17:15 / 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최초)
- (참석자) 권익위원장,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김학린 교수, 집단갈등조정국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민원부서장 등
- (주요내용) 집단갈등민원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특이민원 관련 타운홀미팅, 민원 합리성 검토 위원회 성과·AI 민원 서포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발표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주재(발표)
14:00~14:02	개회 및 내외빈 소개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14:02~14:07	축사1	국무총리 영상
14:07~14:11	축사2	권익위원장
14:11~14:15	환영사	공공갈등조정비서관
1부 14:15~14:45	민원합리성검토 위원회 성과발표, AI 민원서포터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과장
14:45~15:05	권익위 집단갈등민원 해결사례	권익위 서상원 조사관
15:05~15:45	타운홀미팅 (현장에서의 특이민원 대응 및 애로 사항 논의)	공공갈등조정비서관
15:45~16:00	휴식	
16:00~16:40	갈등관리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	김학린 교수
2부 16:40~17:10	집단갈등민원 해결사례 발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7:10~17:13	질의응답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17:13~17:15	마무리 말씀	집단갈등조정국장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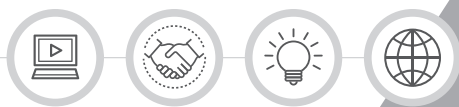
1부

- I** 국무총리실 민원업무 혁신사례,
AI 민원서포터 개발운영 사례 1
발표자 국무총리비서실 이용하 민정민원과장
- II** 8년의 갈등을 넘어
에너지고속도로의 길을 열다 21
발표자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조사관

2부

- I** 갈등관리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 29
발표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
- II** 주민참여를 통한
수상태양광 갈등 해소 모델 39
발표자 한국수자원공사 박지혜 부장
- III** 수물지역 집단이주 갈등 해결 전략 51
발표자 한국수력원자력 윤상근 실장

1부



2026

I

국무총리실 민원업무 혁신사례, AI 민원서포터 개발운영 사례

발표자 국무총리비서실 이용하 민정민원과장

국무총리실 민원업무 혁신 사례

2026. 3. 31.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과장 이용하

BACKGROUND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이후 지시사항



국민 민원자세히 살펴보고 친절하게 대응이 기본!



합리적인 민원인데도 법규·관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국민의 삶에 불편을 야기



합리성 있는 민원은 반드시 해결하라 !!

국민주권정부, 국민의 불편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연간 체감하는 민원 규모 추산
1,500만건+ @
청원·제안·우편·방문·행정심판 등 민원 합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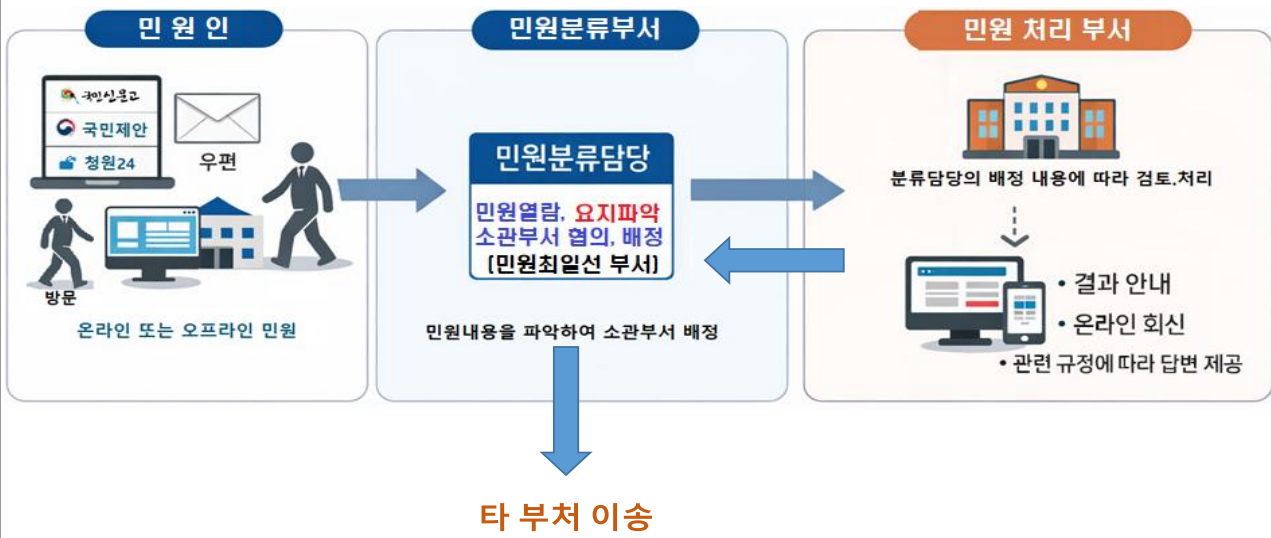
국민신문고 만
1,169만건
'25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

민원내용은 더욱 복잡.다단,
검토·답변 인력은 제한적

- 1 민원 증가·복잡화** 정책·제도·현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 증가
- 2 답변 인력 한계** 방대한 민원을 검토·회신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절대 부족
- 3 규정 중심 대응** 해결보다 안내·설명·불수용 통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
- 4 민원인의 좌절**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한 답변 없이 기대만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

합리적인 민원이라도 기관 검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다시 판단할 지에 대한 장치가 없음 → 합리적인 민원조차 해결되지 않고 종결

현재의 민원처리 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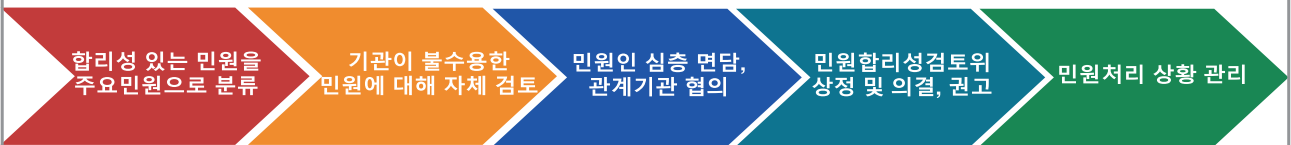
주요민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민원업무 개선계획 수립 (2025.8월)

- 1 **주요 민원 발취**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민원, 정책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 관리**
- 2 **정책부서 간 공유**
매주 전체 부서에 **주요민원 내용 공유, 정책추진시 참고** → 핵심내용은 총리 보고→?
- 3 **민원의 합리성 사전검토**
업무행태, 법규정, 적극행정, 고질적 소극행정 등 **국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 파악**
- 4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민원이 합리적인지 **외부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검토, 개선방안 마련** → 끝까지 관리
- 5 **민원지원 AI 도입 검토**
대폭증가하는 민원을 쉽게 요약, 개선방안 검토를 지원 하는 **AI를 도입** → 효율성 강화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2025.11월)

“기관 불수용 민원”을 “국민 관점의 해결 과제”로 전환하는 **재검토 장치가 필요**
 정책적 영향력이 크지만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시민의 시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이 **민원내용의 합리성을 재검토** → 개선방안 마련



운영 목적

정책적 영향력이 큰 미해결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민주권정부로서 민원 적극 해결**

운영 방식

매월 민간위원회를 열어 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합리적인지 검토, 자문, 권고
 → **시민과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재검토**

관리 체계

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이 안건 관리·기관 협의·현장점검·확인 운영
 → **주요민원은 시민, 언론, 정부에 사례 확산**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무엇을 바꾸었는가?

총3회 위원회 개최로 11건의 미해결 민원 해결

3회 위원회 개최

11건 미해결 민원 해결

26명 민간전문가 인력풀

회의별 성과

1차

2025.11.27

5건 해결

주택연금·차대번호·
덤프트럭뒷바퀴 조명등
가족등록부·공항승강장
분리

2차

2026.1.26

4건 해결

도시가스 감면·소외계층
차별표기 폐지
공항질서·
해외출국자 건보료 중단
간편신고

3차

2026.3.26

2건 해결

학원 보장보험 일원화,
LH 설계용역 기준 사전공고
및 설계변경시 심의위 운영

성과의 유형

시행 완료 및 전국확산

차대번호 수수료 인하, 공항 승강장 분리(2회), 차별표기 폐지, 도시가스 감면 신청 지원

법령·규정 정비

주택연금, 가족등록부, 학원보장보험 일원화, LH 설계용역 기준 등

후속 협의

공항 버스전용차로, 해외장기체류자 일시귀국시 건보료 개선 등

1차 위원회 : 제도 장벽과 현장 불편을 바로잡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기존 주택연금은 **소유자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만 가입 가능**(주택관리자 부재시 불가)

개선 1 주택자가 입원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2026.12월)**

① 병원, 요양시설 입원 ② 자녀봉양으로 타주택 체류, ③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제도 장벽 타파

차대번호 표기수수료 대폭 인하

기존 화물차 안전검사시 의무화된 **차대번호 타각 비용이 '25.4월 급격하게 인상되어**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 소유주에게 부담

→ 최근 10년간 18,500원을 유지하던 비용을 '25.4월 7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

개선 공공기관의 역할 재인식, 타각장비 등 원가재산정을 통해 **70,000원 → 28,500원으로 대폭 인하**(연간1.5만대 혜택)

제도 개선, 현장문제 조정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허용 법령 일원화

기존 12톤~20톤 사이의 **덤프트럭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뒷바퀴 조명등 설치 허용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을 따르는 「건설기계안전기준 규칙」에는 **허용조문 없이 설치 불가**

개선 '25.12월, 행정명령으로 긴급 허용하고 향후 규칙 개정 추진(법령개정 추진 중)

긴급행정명령 및 제도 개선

1차 위원회: 국민권익과 생활안정까지 개선한다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오기 정정

기존

-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시아버지가 혼인한 것으로 잘못 등록
- 정정 후에도 직권정정 이력이 남아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개선

- 본인 귀책 없는 중대한 행정오기는 등록부 재작성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제출)

국민권익 보호

공항 내 택시·버스 승강장 분리

기존

- 공항버스 승차장에 택시, 호출택시, 승용차가 혼잡하게 정차,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없고, 버스승객의 승하차 불편과 안전 위협 초래

개선

- 버스, 택시, 승용차, 호출택시 승강장을 완전 분리하여, 택시를 호출하지 못하는 형편의 노약자나 외국인 등이 택시를 쉽게 탈수 있으며 버스승강장의 승하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 ('25.12월 시행완료)

교통질서 확립 및 생활안정

2차 위원회: 취약계층 보호와 형평성을 개선한다

감면입장권·관람권 차별표기 폐지

기

준 (관람권 차별표기 폐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금산 그린드밸리 등에서 장애인, 임산부 등에 무료 또는 요금감면하여 발급하는 입장권에 '장애인', '임산부' 등을 표기 (통계 목적)

개

선 관람권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일반권과 다른 표기 또는 색상 구분이나 감면·무료권에 민감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일제조치 및 점검(일반권과 감면권 동일 디자인 즉시 조치)

취약계층 보호



2차 위원회: 취약계층 보호와 형평성을 개선한다

기초수급자 전입시 도시가스 감면신청 지원

기 기존 기초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서,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유번호를 알수 없어 감면신청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개 개선 도시가스 공사가 가스감면 '대신신청' 서비스 적극 시행, 전입한 이후에도 감면신청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전화 안내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 시행 → 즉시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성과 | 2026.3.31



2차 위원회: 취약계층 보호와 형평성을 개선한다

공항버스 승강장 불법정차 차량단속

기 기존 '25.12월 김포공항 내 승용차, 택시, 호출택시, 버스 승강장 구역별 운영으로, 누구나 원하는 교통편의 위치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승용차가 버스승강장에 불법 정차하여 버스승객의 승하차 불편 등 교통질서 문제 지속 발생

개 개선 공항공사-서울시-서울시경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하여 민간도로(私道)인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제 지정, 도로표지 정비, 단속 카메라 설치하여 교통질서 단속체계 마련('26.12월)

→ 수년간 지속된 교통질서 정비 요청 민원에 대해 해결이 완료될때까지 끝까지 확인하여 정비 추진

교통형평성 끝까지 관리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성과 | 2026.3.31



2차 위원회: 취약계층 보호와 형평성을 개선한다

해외 장기출국시 건보료 정지 간편신청

- 기** 1. 해외 장기출국 후 3개월 경과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지되는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국내 주소지에 불필요한 고지서가 발급·배송**되어 거주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출국자의 불안 가중
2. 해외장기체류자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일시 귀국시 **'1'일이 포함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

- 개** 장기출국 전·후 세계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건보료 중단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시행('26.12월)**
- 해외장기체류자 일시귀국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추가 검토하여 형평성 해소 방안 마련 예정(추가검토 대상)

형평성·편의성 동시 개선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성과 | 2026.3.31



12

3차 위원회: 기업·현장 애로도 해결 대상으로 확장한다

학원 보장보험 요건 일원화

- 기** 교육부(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은 교육중 발생하는 재해·사고 대비를 위하여 학원 보험을 가입하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 과목을 지정받아 교육하는 경우 고용부가 정하는 보상기준이 교육부 지정기준과 **달라** 한가지만 보상되는 보험을 두가지 모두 들어야 하는 애로

- 개** 수업료지급제착제 과목은 **학원보험으로** 같음하도록 긴급 행정명령 시행(즉시)
- 학원보험으로 보상이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국비교육과정은**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 마련(2026.12월)**

중복 규제 해소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성과 | 2026.3.31

LH 설계용역 설계변경 비용 기준 마련

- 기** 설계공모 사업에 낙찰 된 이후 사업 지연으로 실시 중단 후 사업 재개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설계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대가 산정기준 사전 공개 요청**

- 개** 설계용역 공고 단계부터 설계변경시 비용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계변경시 공정한 용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계 변경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개선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13

전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바뀌어야 할 5가지

민원합리성검토위 성과는 특정 사례의 해결이 아니라, 민원 처리 방식 전환입니다.

- 1** 규정 안내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

민원인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해결 가능한 여지를 먼저 찾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 2** 불수용한 민원도 합리성이 있는지 다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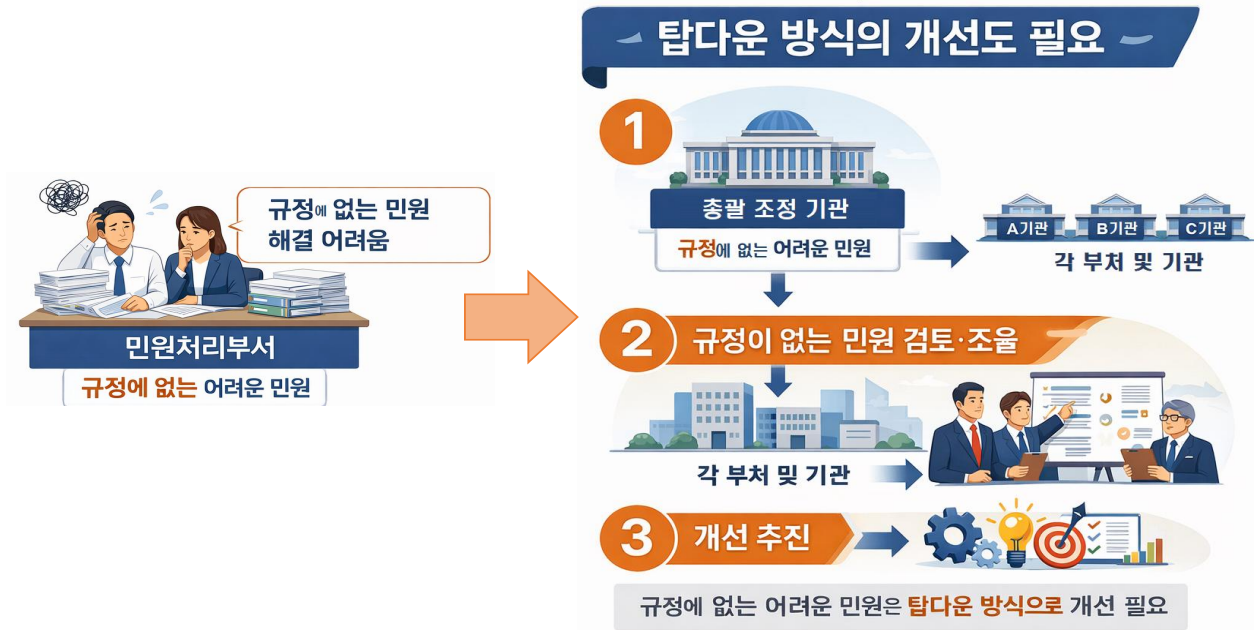
현장 사정·제도 충돌·취약계층 영향이 큰 사안은 상향 검토 대상으로 관리 해야 합니다.
- 3** 민원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적 표현과 불필요한 낙인 배제

표기·절차·서식 하나가 소외계층에게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전 기관이 점검 해야 합니다.
- 4** “민원개선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완료” 될 때까지 관리

공항 사례처럼 한 번 시작한 개선은 후속 정비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 5** 기준과 절차는 공개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

보험·설계변경 기준처럼 비공개 기준은 민원과 갈등을 키우므로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 민원 해결 정부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합리적인 민원이라면 끝까지 해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민원해결 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민원서포터 개발 운영 사례

2026. 3. 31.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과장 이용하

**AI
FOR
ALL**

**정부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류적 관점의 글로벌 AI를
책임 있게 완성 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AI 여권 유지위원회(26. 3. 24) 국무총리 감언식



 국무총리비서실

WHY

매일 쏟아지는 민원, 사람과 시간은 제한적

매일 수백건 민원 인력·시간의 한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

- 민원 원문 읽기
- 핵심 쟁점 정리
- 유사 민원 분류
- 보고용 요약 작성



민원은 더 복잡해짐 정책·제도·개별 사정이 겹친 긴 원문과 다기관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

더 빠른 답변 필요 국민은 자신의 절박함이 지체 없이 이해되길 기대 접수민원은 즉시 소관부서로 배정 의무화

현장은 더 바빠짐 읽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반복 업무에 더 많은 시간 소비

압도적 분량에 매몰 읽는 시간보다 해결하는 시간에 더 많은 역량을 써야 함에도 압도적 분량에 인력과 시간이 매몰

STORY

이걸 어떻게 하지?

압도적 물량, 장문의 복잡한 민원을 즉시 파악해서 배부해야 하는 어려움



시간과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원은 없다.

민원내용 파악이 먼저다

그럼에도, 해결해야할 민원은 많은데 민원시스템의 지원은 적고 더디다.
시스템 소관부처에 요청해서 수정하기에는 갈길이 너무 멀다.

국민신문고, 청원, 제안 등 다수의 정보화시스템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소관 기관의 의사결정은 더디고, 민원직원의 고충은 배가 → 퇴직하는 상황까지 발생



시스템 관리 부처에 요청해서 보완하기에는 시간과 예산 필요

용역사업만이 답인가?

국민신문고, 제안, 청원 등 모든 민원처리 시 AI의 도움이 필요



기존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는 간단한 방식 검토

AI 민원서포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신문고 뿐 아니라 모든 민원처리에 도움되는 AI 민원서포터 개발이 필요



별도의 서버용 장비, 운영소프트웨어 없이 PC에서 동작 → 비용 절감

AI 민원서포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AI 민원서포터는 정부업무망에서 정보유출 없이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정부업무망 내에서 보안성 검증된 생성형 AI 엔진과 연동하여 운영

시민원서포터가 현장에서 하는 일

민원 원문 빠른 요약

긴 민원 원문을 짧은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 처음 보는 민원도 빠르게 파악

대량 민원 일괄 처리 지원

수백~수천건 단위 민원을 한꺼번에 읽고 분석하는 업무를 보조

핵심 쟁점 추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 포인트를 먼저 제시

보고·검토 효율화

검토자와 결재자가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정리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며, 현장 업무에 맞는 실무형 AI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원서포터는 어떤 기능인가?

(첫번째) 엑셀로 내려받은 대량의 민원내용을 분석,요약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신정번호	민원제목	원문요약(동합)	소관부처	민원구분	분류근거	민원내용
1AA-2603-0659683	살려주세요!!!!!!	의료보험료 제납과 한부모가정 지원 불가를 위한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군산 의료보험공단과 군산시 등에 도움을 요청함	군산시	행정	행정서비스(의료보험, 한부모가정 지원 등) 관련 어려움 해소함 법령: 국민기초생활	저는 중고학생 두아들을 혼자 키우는 불쌍한 열매입니다 재가 영의를 빌려주고 사문서 위조로 사기당해서 중성법원 3
1AA-2603-0655479	장속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장속부동산 등기이전 절차 및 제도 개선 요청함	법제처	정책	제도 개선 요구가 핵심 법령: 민법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명의이전 도와 밤을 가리지 않고 365일 내내
1AA-2603-0659215	서구 주민들 건강 책임지세요!!!!!!!!!!!!	염색공단 및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로 인한 주민 건강 문제 해결과 악취 저감 조치, 국민세금으로 사기당한 염색공단 지원 이유 및 주민 지원 방안	대구지방환경청(환경부)	행정	개별 사건 처리 및 정책 관련 요구에 해당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염색공단 냄새(엔터,화학약품,노과,밤을 가리지 않고 365일 내내
1AA-2603-0659050	복합악취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악취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 및 주민 건강 피해 보상을 요청함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행정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피해 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염색공단 냄새(엔터,화학약품,노과,밤을 가리지 않고 365일 내내
1AA-2603-0659001	서구 주민들도 맑은 공기 좀 마셔 봅시다!!!!!!!!!!!!	서구 지역 복합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 요구 및 국민세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 요청함	환경부(환경공단)	행정	개별 지역 환경문제 해결 요구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염색공단 냄새(엔터,화학약품,본 민원인은 2026.3.19.목요일 민원인이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 진술서를 제출한 후 6시 오후 까지, 교통조사계를
1AA-2603-0655805	경찰 비위 정황에 관한 국가적 국민적 감시 시스템 부재에 대한 CCTV 열람청구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CCTV 열람 및 보존, 양발주 팀장의 유착 의혹 관련 정보공개 요청함	경찰청(광진경찰서)	행정	개별 사건 처리와 정보공개 청구 등 행정 관련 업무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김보형 수사관 및 순병성 조지공명 고발장 최종본]이 내용을 지금 즉시 국민신문고 **법무부 검찰담당관실**과
1AA-2603-0656861	[긴급 고발] 법무부 김보형 수사관의 416억 불법 대출 은닉 방조 및 증거인멸 공모를 고발하며, 직무유기와 전산 조작 방조, 확인을 요구함		법무부 (광화문담당관실)	민형사	고발 및 수사 요구 중심이 민형사, 분쟁 관련임 법령: 형사소송법	

AI민원서포터는 어떤 기능인가?

(두번째) 우편.방문 민원서류도 분석하여 요약합니다



AI민원서포터, 어떤 성과가 있는가?

AI 민원서포터 도입 효과

<p>1. 재정절감 효과</p> <p>₩2억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비 절감 유지관리비 최소화 ISP사업, 용역발주 및 관리 등 행정력 절감 	<p>2. 민원 처리 효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 & 대량 처리 건별 분석 처리 → 시발용시 수조-수분내 내용분석 	<p>3. 민원처리 품질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동요약 · 법령추천 소관기관 분류&근거 제시
<p>4. 업무부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분류 → 정책판단 	<p>5. 민원 대응·체감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속도 & 만족도 향상 	<p>6. 정책 발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분석 → 정책발굴
<p>7. 조직 운영 효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표준화 & 인력배치용이 	<p>8. 전국 확산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비용 고효율 모델 	

민원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읽는 시간 단축

- 긴 원문을 일일이 처음부터 읽는 부담 감소
- 핵심 내용부터 파악해 검토 속도 향상
- 반복 정리 업무를 줄여 실질 업무 시간 확보

우선순위 판단 용이

- 어떤 민원을 먼저 봐야 하는지 판단이 쉬워짐
- 유사 쟁점·반복 민원 파악이 빨라짐
- 검토자·결재자 간 정보 공유가 빨라짐

해결 중심으로 전환

- 읽기·요약보다 실제 조치 검토에 더 많은 시간 투입
- 민원 파악의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가능성 확대
- 현장 공무원이 “덜 지치고 더 정확하게” 일하도록 지원

AI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더 잘 일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AI민원서포터의 목표는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더 빠르고 더 나은 답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더 빠른 답변

민원 내용을 빨리 파악할수록 답변과 조치도 더 빨라집니다.

더 적은 누락

반복·유사 민원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놓칠 가능성을 줄입니다.

더 정확한 이해

긴 민원 속 핵심이 놓치지 않게 정리되어 국민의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합니다.

더 큰 신뢰

공무원이 민원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빨리 대응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민원공무원의 시간이 절약될수록, 그 시간은 결국 국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빨리 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왜 이 방식이 특별한가

일반적인 기관의 AI 개발 한계

- 단건 질문·답변 중심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대량 데이터 처리는 기획·개발 난도가 높음
- 장기간 개발기간과 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인식 존재
- 현장 실무와 개발 사이 거리가 멀어 실제 활용까지 오래 걸림

AI민원서포터가 보여준 가능성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구현
- 기존 정부 인프라(인트라넷·패브릭스 엔진)를 활용
- 대량 민원 처리라는 실무의 핵심 병목을 정면으로 해결
- 다른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실무형 모델 제시

현장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만든 AI는 적용도 빠르고, 효과도 분명합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협조 요청

향후 개발 방향

- 대량의 민원을 분석하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
- 개별 민원 처리 지원을 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불편의 구조를 읽는 기능 강화
- 정부기관 내 패브릭스 엔진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한 민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

개발 내용은 전 기관에 배포합니다.

- 모든 기능은 시범운영을 거쳐 필요한 기관에 공유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서 접수대기 민원 다운로드시 민원내용도 즉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현재는 정오, 자정 등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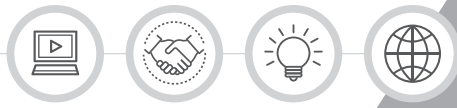
이 지원이 필요한 이유

- 민원 원문 확보가 쉬워질수록 분석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
- 현장 공무원이 더 빠르게 민원을 파악하고 처리 가능
- 정책과제 발굴 기능의 실효성도 높아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2026

II

8년의 갈등을 넘어 에너지고속도로의 길을 열다

발표자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조사관

8년의 갈등을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의 길을 열다

한전-당진시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성공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민원갈등조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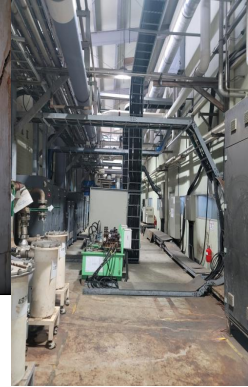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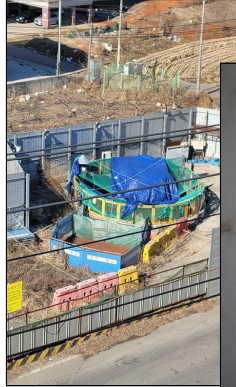
SECTION 01

갈등의 배경과 고착화

상생의 시작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8년의 기록

2017년 협약과 2018년 사고

- 2017년: 한전-당진시 상생협약 체결 (전력망 협조 vs 특별사업비 지원)
- 2018년: 지중화 터널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 발생
- **결과:** 신뢰 관계 붕괴, 8년간의 소송전
피해기업, 한전 상대 민사소송 제기
당진, 관내 모든 한전 사업 인허가 전면 불허
한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당진시장 고소
당진, 사고 발생 이외 지역까지 원상회복 명령
한전,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
- **영향:**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 장기 표류



8년의 표류가 남긴 사회적 비용



법적 분쟁의 심화

민사 형사 행정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소송 비용** 및
행정력 낭비 지속



전력 공급 불안정

수도권 및 국가 주요 산업단지
 전력 공급 계획 차질로
에너지 안보 위협



민관 신뢰 실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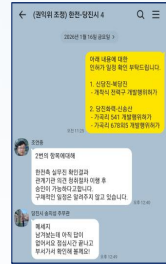
국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 단절로
지역 사회 갈등 고조

SECTION 02

권익위의 전략적 조정 과정

25번의 만남-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끈기, 다양한 시도

25번의 만남: 1년간의 끈질긴 협의 그리고 이행관리



2024년 말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5년 12월

2026년 1~2월

갈등 상황 인지 및
조정 착수 **동의 확보**

말하지 않는 속마음
니즈 찾기(사기꾼vs표)

명분과 실리의 줄타기
25차례 협의(투트랙)

비서관, 사무처장
현장 방문 및 조정

이행점검(인허가vs기금)
카톡방 운영

핵심 전략: 두트랙(Two-Track) 조정

Track 1: 즉각적 상생 복원

기존 상생협약 정신으로 복귀하여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인허가 심의 및 특별사업비 지원 재개

Track 2: 피해 보상 분리

가장 큰 갈등인 '지반 피해 민간 보상'은 별도 트랙으로 분리해 '26년에 처리하기로 합의

"복잡한 실타래를 한 번에 풀려 하지 않고, 작은 성공, 작은 신뢰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

조정서

1. 한전-당진시간 신뢰회복 및 협약
 - 한전과 당진시는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
 - 행정소송의 원인이 되는 원상회복 취소
 - 당진시 관내 멈춰 있던 한전 사업 인허가 재개
 - 당진시 발전을 위해 한전의 특별사업비 지원
2. 향후 협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 매분기 운영

실무협의를서

1. 사고지점 원상회복 명령 취소 시점 및 절차
 - 터널 공사 구간과 개착식 공사 구간 분리해 접근
2. 행정소송 포함 고소 고발 취하 시점 및 절차
 - 조정 전에 취하함으로써 상호 신뢰 보장
3. 특별사업비 지원 금액 및 시기
 - 신뢰 회복을 위해 인허가 신청 이전에 지원
4. 당진시 관내 한전 사업 인허가 대상 및 시기
 -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인허가 대상을 특정하고 각각의 해당부서 담당자와 신청-인허가 시기 조율

에너지 고속도로의 물꼬를 트다



전력망 적기 구축

현대제철 등 인근 산업단지에
필요한 **예비 전력 공급** 및
재생에너지 송전망 기반 마련



경제적 기대 효과

에너지 전송 효율 증대 및 발전
제약 해소를 통해 **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 및 **비용 절감**



갈등 해결 모델

향후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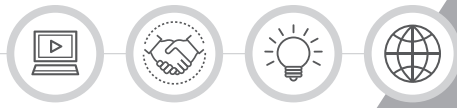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단갈등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민원상담 110 | 홈페이지 accr.go.kr

2부



2026

I

갈등관리방식의 변화와 조정 이해

발표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

갈등관리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

김 학 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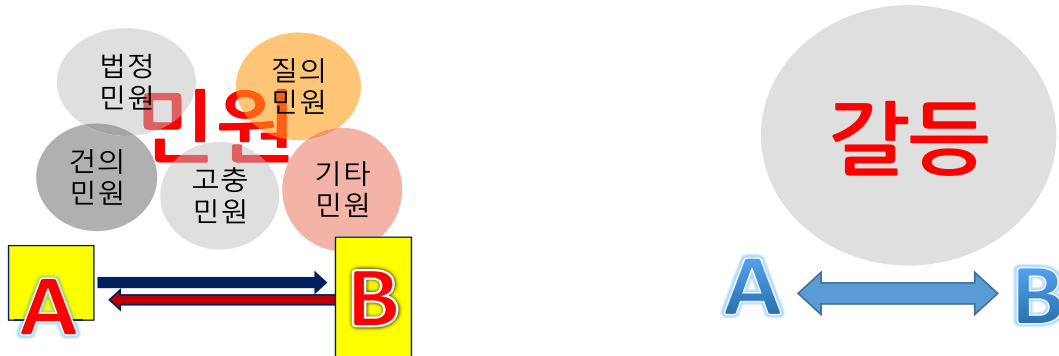
haklin509@naver.com

Contents

- I. 들어가기
- II.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 III. 조정프로세스
- IV. 맺음말

들어가기(1)

• 민원과 갈등



-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공공갈등**: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갈등관리방식의 변화(1)

갈등관리의 의미

질문 : 법과 규정대로 일하는 행정에서 갈등관리(이해관계자간 합의)가 무슨 의미?

-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
 - ✓ 합법적인 것은 항상 정당한가?
 - ✓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적 결정의 영역이 존재
 - ✓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매립 종료여부 : 해당지역 주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 ✓ 대구시와 구미시간 낙동강 물분쟁 (취수원 이전 여부)

갈등관리방식의 변화(2)

1.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입법예고

- 2003.6-2004.2까지 전개된 부안 방폐장 입지선정 갈등의 여파로 공공기관의 체계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응한 결과 행정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됨
- 주요 내용 :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도입과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공갈등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조정회의, 공공기관의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으로 구성

** 더불어, 부안 방폐장 입지선정 갈등은 **주민투표법** 제정의 계기가 됨.

- .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 제정(2004년 7월 30일 시행)
- . 2004년 2월 14일 부안, 사상 최초 자발적 주민투표 시행
(투표율 : 72.04%, 반대 91.83%)
- . 2005년 11월 3일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에 주민투표법 최초 적용(경주)

2. 2007년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

-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것에 바탕을 둠

갈등관리방식의 변화(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갈등관리방식의 변화(4)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 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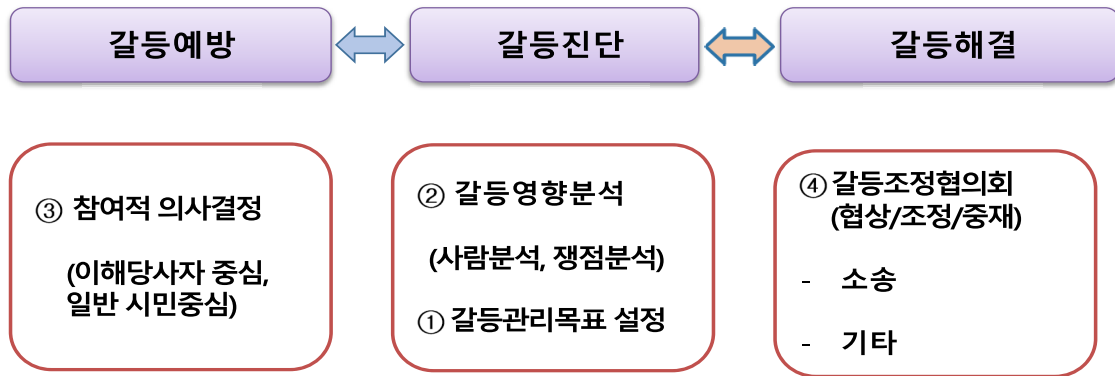
갈등관리방식의 변화(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갈등관리 종합시책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갈등영향분석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일반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갈등관리방식의 변화(6)

• 갈등관리프로세스



갈등관리방식의 변화(7)

갈등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매뉴얼 국무조정실 2020)

공공갈등
인식변화

사후적 갈등해결 → 사전적 갈등예방

정책추진 결과의 중요성 → 정책추진 과정의 중요성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사법적 판결(독자적 관리) → 당사자간 협상, 조정 중재 등

갈등조정프로세스(1)

조정(Mediation, 調停)이란 무엇인가

- 당사자간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절차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식
- 현실적으로는 조정자가 일부 대안을 직접 제시하거나(노동위원회 조정),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조정을 주도하는 경우(power mediation)도 존재
- 유사 기법 : 화해(알선, conciliation), 촉진(facilitation)
- 유사 용어 : 調整(coordination)

갈등조정프로세스(2)

조정자의 위상과 역할

- **조정자의 위상**
 - ✓ 조정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함
 - ✓ 조정자가 갈등당사자 모두 또는 한 쪽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의하면 조정자로서의 역할 가능
- **조정자의 역할**
 - ✓ 갈등당사자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 발생한 갈등원인에 대해 갈등 당사자가 주장하는 의견을 갈등 당사자 양측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 ✓ 갈등원인을 정리 후 갈등당사자들 스스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 대안은 갈등당사자들이 제시 후 갈등당사자 상호간 합의하는 것임
 - ✓ 조정자는 갈등당사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 조정자는 갈등당사자들의 인간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함

갈등조정프로세스(3)

공공갈등조정의 유형

조정	중립적 제3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과 주민들간의 갈등 • 타기관과의 갈등 • 해당기관 내지 상급기관이 조정 의뢰(비용부담) • 사례: 00구청과 주민간의 적환장 갈등을 서울시가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Power 조정	해당 기관 직접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간의 갈등(해당 기관이 인·허가권 보유) • 하위 기관 간의 갈등 • 사례: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택조합조합원과 건설회사간의 갈등을 인·허가권자인 해당구청이 직접 조정
합의 형성	촉진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내지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합의 촉구를 시도 • 양자간의 조정 대신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를 도모 • 사례: 00구청 노점상 정비(노점상, 주민, 점포상인, 구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상생자율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의)

갈등조정프로세스(4)

조정 개입과 조건

1. 개입은 필요한가?	2. 개입의 적절한 유형은? (조정 적합여부)	3. 해당기관(담당공무원)은 조정에 적절한 사람인가?	4. 제3자 조정자의 활용?
갈등의 영향 : - 긴급성 - 중요성 갈등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역량: - 능력 - 동기	갈등의 영향 : - 긴급성 - 중요성 갈등해결을 위한 주인공의 역량 : - 능력 - 동기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 - 신뢰의 정도 - 장기/단기 이슈의 성격 : - 내용적 이슈 - 감정적 이슈	공무원(해당기관)의 특성 : - 방어할 이해관계 - 편견 - 개입 역량 - 유효성 이해당사자와 해당기관의 관계 : - 신뢰의 정도 - 상대적 지위	조정자의 특성 : - 내부/외부 - 능력

갈등조정프로세스(5)

조정 절차

사전준비(협의)

- 조정가는 쟁점, 입장, 이해관계, 갈등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합의형성방안(조정) 수립
→ 갈등영향분석 + 조정 패키지 활용 가능
- 이해관계자와 조정협의체 운영방안 합의
(회의 명칭, 참가자, 배석자여부, 조정장소, 회의의제, 진행규칙 및 방식 등)

조정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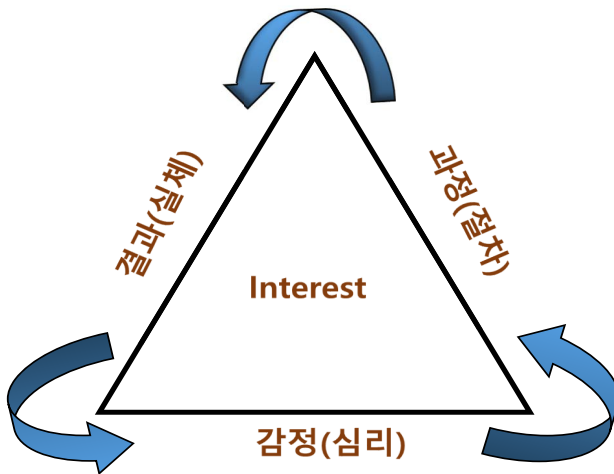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간의 관계에 따라 2가지 전략 가능
 - ✓ 문제 해결 전략
 - ✓ 관계 개선 전략
- 통상적 진행단계
 - ✓ 1단계 - 참여분위기 조성 및 친밀감 증대
 - ✓ 2단계 - 갈등원인 및 그간 과정을 둘러싼 감정과 경험의 공유하고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관점의 확대 도모
 - ✓ 3단계 - 의제별 진정한 이해관계 규명
 - ✓ 4단계 - 각각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다양한 대안의 모색
 - ✓ 5단계 - 합의 및 이행계획 수립

합의안 작성 및 향후 계획 수립

- 합의안 작성 및 향후 이행계획에 관한 의견 조율
- 서명식, 홍보전략(공개여부) 및 문안 조정
- 당사자 서명, 조정자 서명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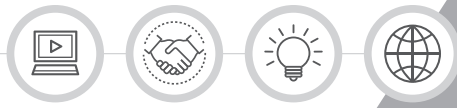
맺음말(1)

만족의 삼각형



- 결과 : 갈등 해결의 결과
- 과정 : 갈등 해결의 절차
- 감정 : 해결과정에서의 감정적 만족 여부(정성)

2부



2026

II

주민참여를 통한 수상태양광 갈등 해소 모델

발표자 한국수자원공사 박지혜 부장

‘NIMBY’를 벗고 주민참여 새 옷 입은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갈등 해소의 롤모델이 되다

2026. 03. 31. [화]



한국수자원공사 범무실

‘NIMBY’를 벗고 주민참여 새 옷 입은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갈등 해소의 롤모델이 되다

CONTENTS

1 K-water 일반 현황

2 주요 갈등 해소사례

합천
수상
태양광

- ①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
- ② 합천 수상태양광 갈등 및 해결과정
- ③ 합천 수상태양광 성과 및 기대효과
- ④ 수상태양광 사업 수용성 확보 방안
- ⑤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3 2026년 중점 추진 갈등관리 계획

1. K-water 일반 현황



K-water, 시대적 임무를 완수하며 성장·발전

시대적
임무

국가경제 발전 기반 마련

국민 복지·생활 수준 향상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선도

설립 목적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추격 (도시화, 산업화,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

새로운 임무 : 국제사회의 난제 해결

1967. 11. 1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소양강·안동·
대청·충주 등
다목적댐 건설·관리



1988. 7. 1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

수도권·대청권, 울산 등
광역·공업용수도
건설·운영



2018. 6. 8 물관리 일원화

소속부처 변경 (국토부 → 환경부)

2023. 3. 22 UN Water Conference

46년 만에
두번째 개최 및
정례화(3년 주기)



1974. 2. 1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

창원·여수·
구미·반월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1993. 10. 27 해외사업 착수

2004. 3. 12 지방상수도 운영 개시

2009~2012 국책사업 수행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살리기

2016. 3. 24 아시아물위원회 창립

국제사회와 K-water 경험 공유·협력

2023. 11. 16 새로운 비전 선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1974. 10. 15 본사 이전 (서울 →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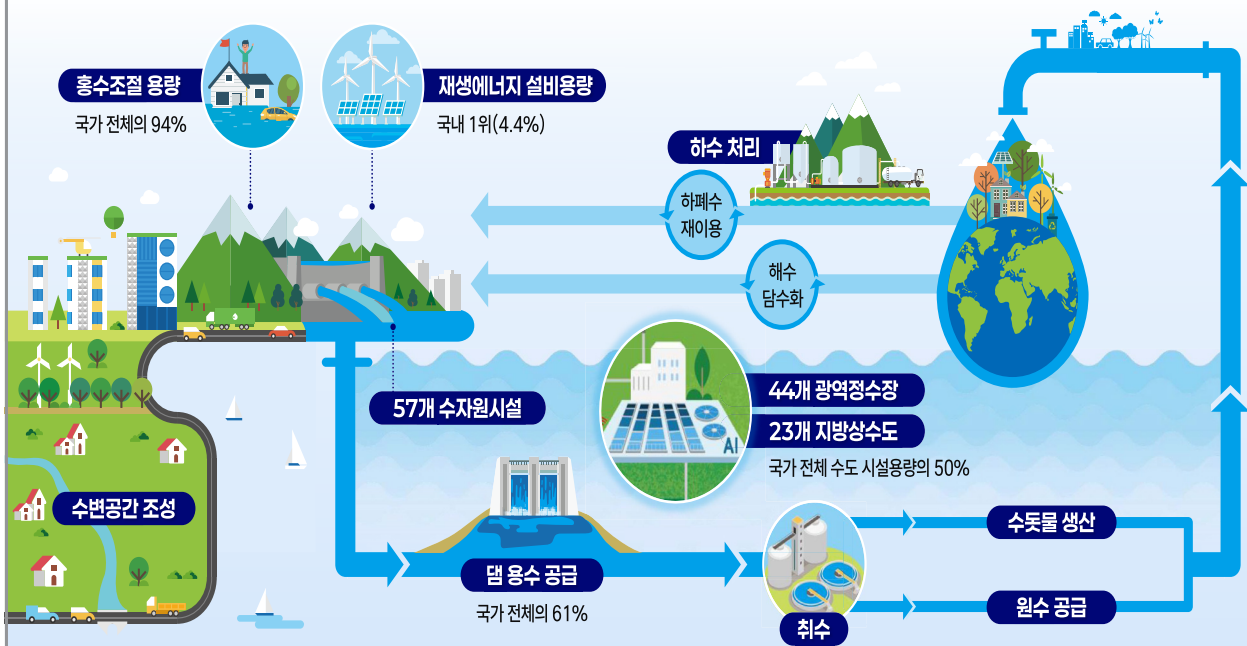
최초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1. K-water 일반 현황



K-water의 사업영역

수자원정책과 공기업정책이 결합되어 탄생, 물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



1. K-water 일반 현황(갈등관리 제도)



운영근거



☑ K-water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13. 6)을 통해 갈등관리 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

*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업무절차 및 부서별 명확한 역할 명시

갈등관리



갈등 발생 前

☑ 투자심사 대상사업 갈등관리 사전검토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투자심사 대상)에 대해 갈등관리 필요성 사전검토(사업부서 → 법무실)
- 사업 갈등관리 사전 진단 점수에 따라 갈등 유발가능성 낮음(~25점), 갈등관리 주의 필요(25~49점), 갈등관리 필요성 높음(50점~)으로 3단계 구분

☑ 갈등관리 컨설팅

: 현안 부서에 갈등전문가 매칭,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공

- '21년 도입 이래 15회 컨설팅(3회/년)

☑ 갈등영향분석

-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 예측·분석
-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방안 등 제시

갈등 발생 後

☑ 갈등현안 점검회의

- 갈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지원
- 현안 부서장의 요청 등으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 갈등조정협의회(ex, 주민협의회)

- 갈등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기구
-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사업' 운영을 위한 주민소통 협의회 운영 중('25년~)

의사결정 및 지속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공동위원장 2명 포함, 12명(내·외부 각 6명)으로 위원 구성

☑ 갈등과제 전주기 관리

- 갈등 발생부터 종결까지 정기적으로 갈등현황 점검 및 수시 지원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1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소개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달성
* 재생e 상향 목표 이행('30년, 78GW)

정부 정책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재생e 100GW 보급) 달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도

수상태양광 개요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시설로서 태양광 모듈을 댐,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시설

수상태양광 장점



주요 장점

- ☑ 저수지 증발량 감소
- ☑ 조류번식 억제 효과
- ☑ 부지확보 용이
- ☑ 발전효율 증가(냉각효과)
- ☑ 전력계통 효율적 이용
- ☑ 친환경 세척 가능
- ☑ 태양광 설치 용이

K-water 수상태양광 운영 현황 (현재 기준)

발전소명	합천#1	보령#1	충주#1	합천#2	충주#2	소양강#1	임하#1
준공연도	'12.9	'16.3	'17.12	'21.11	'22.8	'23.11	'25.7 (상업발전 계획)
발전용량	0.5MW	2MW	3MW	41.5MW	2.6MW	8.8MW	47.2MW
사업모델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주민참여	직접투자	주민참여	주민참여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1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

사업명	▶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용주면 일원 (합천댐 수면)
시설면적	▶ 466,831m ² (합천댐 저수면적의 1.8%) * 축구장 65개 넓이
규모	▶ 41.472MW (연간 발전량 56,388 MWh) * 연간 2만가구 사용량
사업기간	▶ '15. 09. ~ '22. 01.
사업비	▶ 767억 원 (주민참여금액 30.7억 원, 총 사업비의 4%)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소계	K-water	한국서부 발전(주)	소계	금융기관	주민
153억 원	78억 원 (51%)	75억 원 (49%)	614억 원	583억 원	31억 원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2 합천 수상태양광 갈등 및 해결과정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고소·고발, 무력시위, 공사방해, 현수막 게시 등

주민반대 ①

수상태양광 사업의 부정적 인식

경관훼손으로 관광객 감소, 사업과정 중 주민배제, 주민들에게 無이익



주민반대 ②

환경안전에 대한 우려

수질오염, 빛 반사로 인한 식재 고사, 전자파 발생, 경관 저하 → 부동산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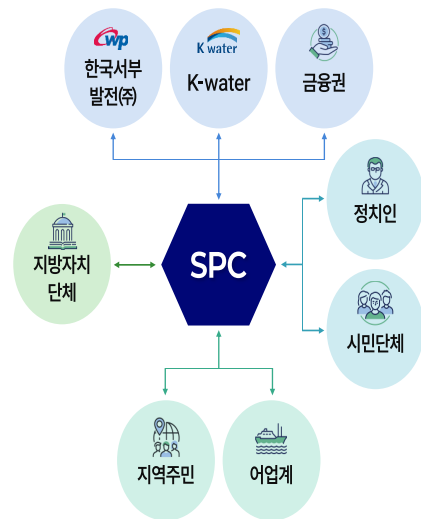
주민반대 ③

송전선로 설치 반대

주민 재산권 침해, 농작물 생산 저하, 지주 설치 등 경관 저해

주요 이해관계자

투자사(SPC) | K-water |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인 |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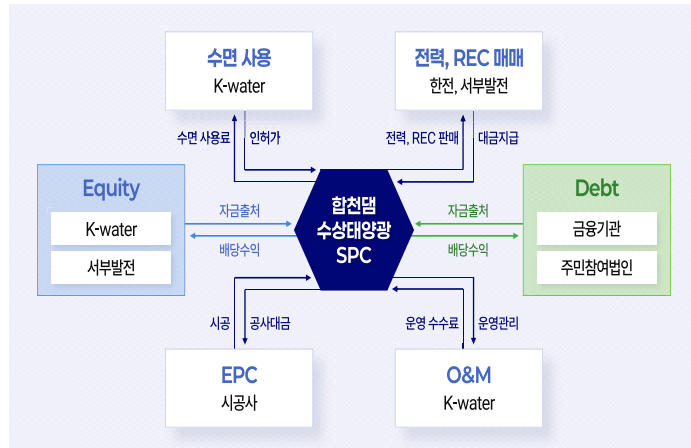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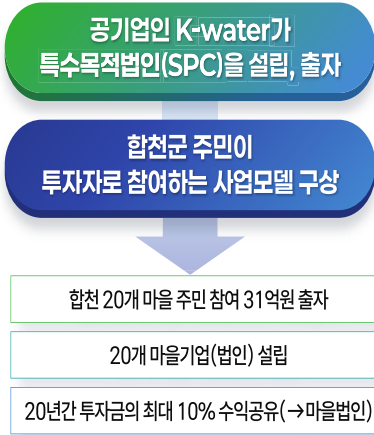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2 합천 수상태양광 갈등 및 해결과정

해소방안 ① 주민체감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 개발

기존 K-water 직접투자 + K-water 수익 → 확대 직접투자·주민참여 + K-water, 지역주민 수익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2 합천 수상태양광 갈등 및 해결과정

해소방안 ② 반대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정, 역지사지 체감프로그램 시행

<p>주민소통·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천군 ↔ K-water 업무협약('15.11) 사업계획 및 정보전달을 위한 공식 주민설명회 20회('17~'21) 	<p>주민체감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설치된 수상태양광(충주호) 현장 방문 설치지역 관광인프라 견학으로 지역활성화 비전 제공 
<p>주민협의체 발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명을 대표한 이장단(26명) 중심의 협의기구 발족('20.1) 월례회 개최로 사업 진행 상황공유, 건의사항 수렴 등 의사결정 진행 	<p>지역주민 일자리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기간 지역주민 시공인력 참여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 약 3천명 지역인력 활용 (인건비 : 약 3.2억원)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② 합천 수상태양광 갈등 및 해결과정

해소방안 ③ 정부기관 등 협업으로 환경안전 신뢰 확보

- 외부기관과 함께 8년에 걸친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모니터링으로 안전성 검증

환경모니터링 항목별 결과

운영 주기	국내 댐 내 최대규모 시설로 발전시설 운영 전 기간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계획 수립, 안전성 지속검증	수질	1회/월	플랑크톤	1회/월	저서생물	1회/월	퇴적물	1회/계절	조류	1회/계절	어류	1회/월
객관성 확보	주민이 선임한 전문가가 모니터링에 참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대조지점과 차이 없음	기준값 이하	영향 없음	어류 개체수 증가						
투명한 정보	既 설치된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범시설 환경모니터링('11년~) 상세 결과를 주민과 발전시설운영협의체에 정기(반기) 공유												

해소방안 ④ 송전선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및 합의



발생 즉시 합천군수 면담 및 중재, 공사계획 설명회 개최(2개리, 6회)



일부노선(1.1km) 지중화 등 설계변경을 통해 반대위원회와 합의안 타결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③ 합천 수상태양광 성과 및 기대효과

경제 효과

이익공유

1년간 2만가구 가능한 전력 수급, 합천도 인근 거주자 대상 투자수의 배당

주민투자금 31억원에 대해 투자수의 10% 지급(주민참여법인)

* (지급시기) '22년부터 '41년까지 20년간 매년 3.9월 말(2회)

관광명소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까지 고려한 수상태양광 디자인 국내 최초 도입으로 관광자원화

* 합천군 군화(群花) 매화 형상, 야간 조명 설치



환경 효과

수질사고 제로

수돗물 위생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기자재 사용, 약품 없이 오로지 물로만 조류배설물 세척으로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등 환경·수질 문제 및 사고 ZERO

미세먼지 감축

연평균 2.6만톤 탄소 감축 → 미세먼지 28톤 감축 (소나무 400만그루 대체 수준)

벤치 마킹

대내외 기관 방문

대한민국의 대표 수상태양광으로써 방글라데시, 유네스코, 삼성중공업 등 국내외 다수 기관 방문(20회)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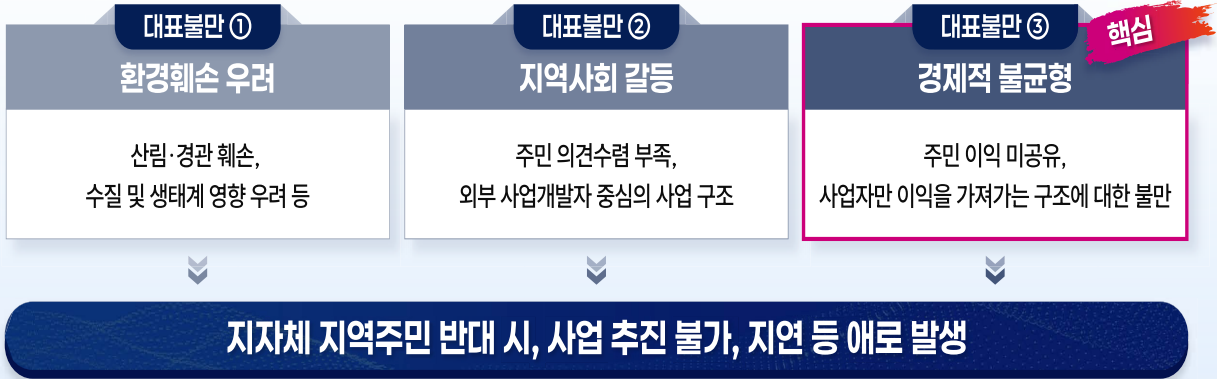
4 [시사점] 수상태양광 사업 수용성 확보 방안

수상태양광 사업 주요 문제점 및 불만

현황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지역 주민수용성 확보는 인허가 선결 사항**

*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시, 수용성 확보 사항 증빙 필수

문제점 :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지 수용성 확보는 시급한 사안임**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4 [시사점] 수상태양광 사업 수용성 확보 방안

수상태양광 사업 주요 대응방안

개발대상지 지역 주민,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모델에 알맞은 단계별, 시기별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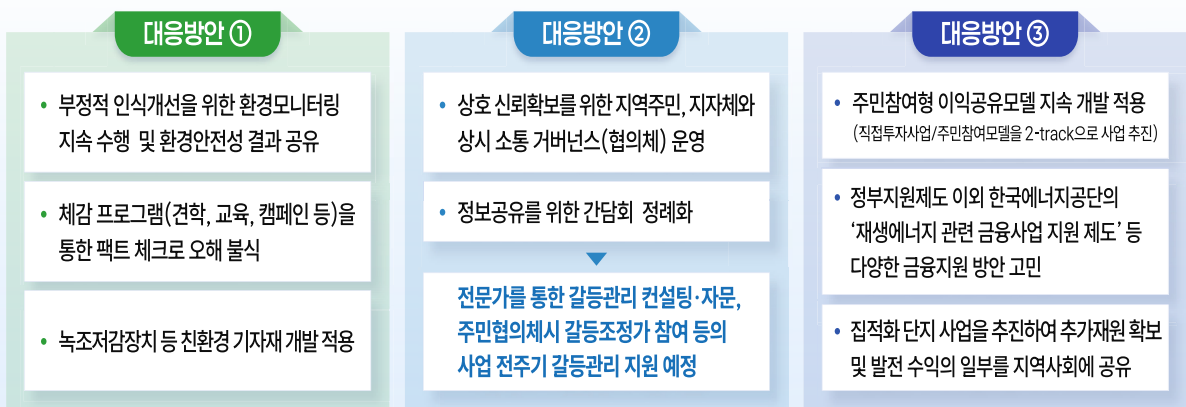
지역사회 주민설명회



주민체감 프로그램



주민협의체 의견반영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4 [시사점] 수상태양광 사업 수용성 확보 방안

정부, 지자체, 타기관 등 적극 협업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5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

2030년까지 7개 댐, 8개 프로젝트

현재 3개 사업 개발·추진 중

합천, 보령, 군위

향후 5개 사업 개발·추진 예정

충주(2개소), 안동, 영주, 소양강

구분	'26	'28	'29	'30	계
주민참여	합천#3	충주#3 안동#1	소양강#2	충주#4	5개소
직접투자	보령#2 군위#1	영주#1	-	-	3개소
계	3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8개소

2. 주요 갈등 해소 사례



5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수상태양광 관련
정부 협업 및
제도개선 의견

01

수상태양광사업 주민참여시 저금리 정책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필요

-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다양한 금융 지원제도 확대 (에너지관리공단 등)

02

총사업비의 4% 초과 투자분에 대한 REC 가중치 신설 필요

- **현행** 총사업비의 4% 이상 0.2REC 부여 → **개선** 참여 비율이 늘어나면 추가 가중치 부여
- 주민들의 투자비용 상승 요구에 따라 4% 초과분에 대한 가중치 신설
예) 총사업비의 6% 이상 0.3REC 부여 등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03

집적화단지 확대를 위한 후보지 지정 기준 완화

- 집적화단지 입지조건 : **현행** 발전용량 40MW 초과 → **개선** 발전용량 20MW 초과
- 집적화단지 지정시 REC 가중치 추가부여(최대 0.1)를 통해 주민들에게 추가 이익분배 가능

* 관련규칙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3. 2026년 중점 추진 갈등관리 계획



추진목표 국경과제 연계 전략적 사업 지원으로 경영리스크 저감 및 안정적 사업 추진

전사 중점 갈등과제 선정, 전주기 갈등관리

전사 차원에서 중점 관리해야 할 갈등과제 선정, 갈등 종결까지 전주기·전방위 지원

전사 갈등과제
신규 발굴 및 현행화

- 신규 갈등과제 조사 및 기존 갈등과제 현행화 등 정기적 현황파악
- (등록대상) 갈등관리 사전검토 결과 갈등 진단 수준 '갈등관리 주의' 이상, 갈등관리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의

중점 갈등과제
(3건) 선정

- 갈등과제별 갈등 수준 진단지수 산출(계량화 후 갈등수준 3단계 설정) 민원, 언론보도, 이해관계인 규모 등을 변수로 갈등 수준 계량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보고·의결을 통해 중점 갈등과제 최종 선정

갈등 전주기 관리
및 지원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및 갈등 현황 정기 보고
- 내·외부 갈등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컨설팅 등 지원 시행
- 정부부처 등 대내외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목표] 연중 갈등관리 활동을 통해 연말 기준 갈등진단지수 10% 저감

AI 기반의 갈등 조기경보제 도입·운영

갈등의 징후와 반복 패턴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갈등 확산 가능성, 선제 대응 여부 판단

데이터 수집

내부
민원
K-CRM
국민신문고
법률자문·소송
법무통합정보

데이터 AI 분석

사업별 데이터 분류
수자원 권역수도 지방수도
단지분양 일반관리 기타

갈등 징후 검출

키워드 민원·언론보도 빈도
이해관계자 성격·규모 등

갈등 경보 통지 및 대응 방안 제공

사업별·경보 단계별 대응 방안 도출
수자원 권역수도 지방수도
단지분양 일반관리 기타
갈등 유발 가능성 낮음
갈등관리 주의 필요
갈등관리 필요성 높음

갈등 대응 방안 도출

해당 부서 갈등 경보 통지 및
갈등 대응 방안 제공

지역주민과 함께 꽃피운 수상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꽃으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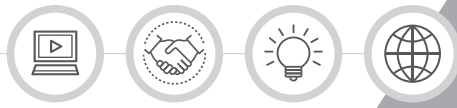
'NIMBY'를 벗고 주민참여 새 옷 입은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갈등 해소의 롤모델이 되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2부



2026



수몰지역 집단이주 갈등 해결 전략

발표자 한국수력원자력 윤상근 실장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수몰지역 집단이주 갈등 해결

2026.3.31.(화)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합의 사례

목차

CONTENTS

- 1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개요
- 2 집단이주 발생 배경
- 3 이해관계자 및 주요쟁점
- 4 집단이주 추진 방안
- 5 집단이주 Win-Win 구조
- 6 성공 요인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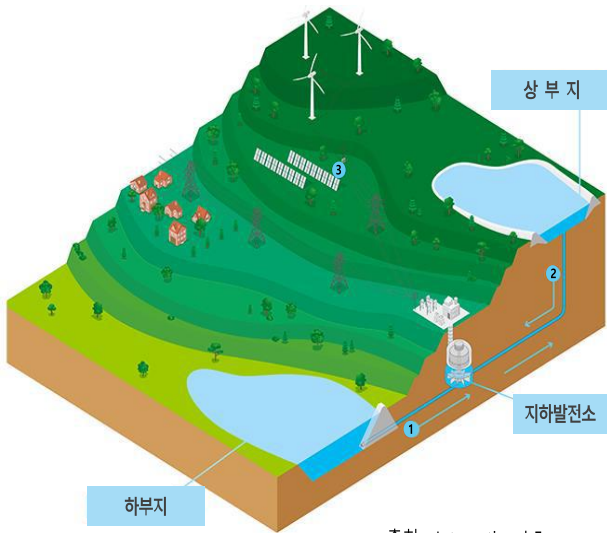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 발전소 건설 개요

양수발전소 개념도

양수 발전

- ✓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렸다
- ✓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 (에너지 저장장치)



- ✓ 전력이 수요가 낮을 때, 태양광, 풍력 등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상부지로 물을 끌어올림
- ✓ 전력이 수요가 증가할 때, 하부지로 물을 내려 터빈을 통해 전력을 생산함
-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조합된 양수발전은 수요자에게 신뢰도 높은 전력공급이 가능함

<출처> International Forum on Pumped Storage Hydropower(IHA,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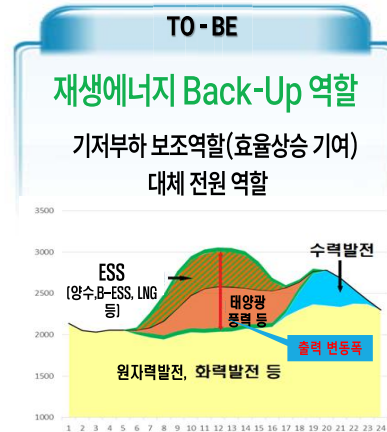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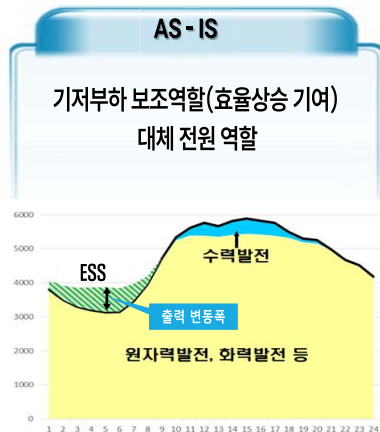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

영동양수 발전소 건설 개요

양수발전 역할

원자력, 화력 등 기저 부하 보조 역할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대응 백업 설비



-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 저장 후, 전력 부족 시 발전하여 출력변동성을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Back-up 역할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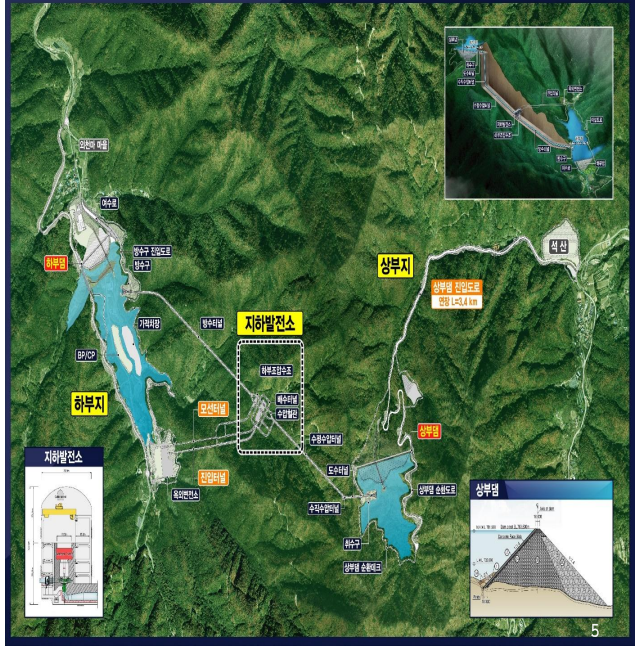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

영동양수 발전소 건설 개요

영동양수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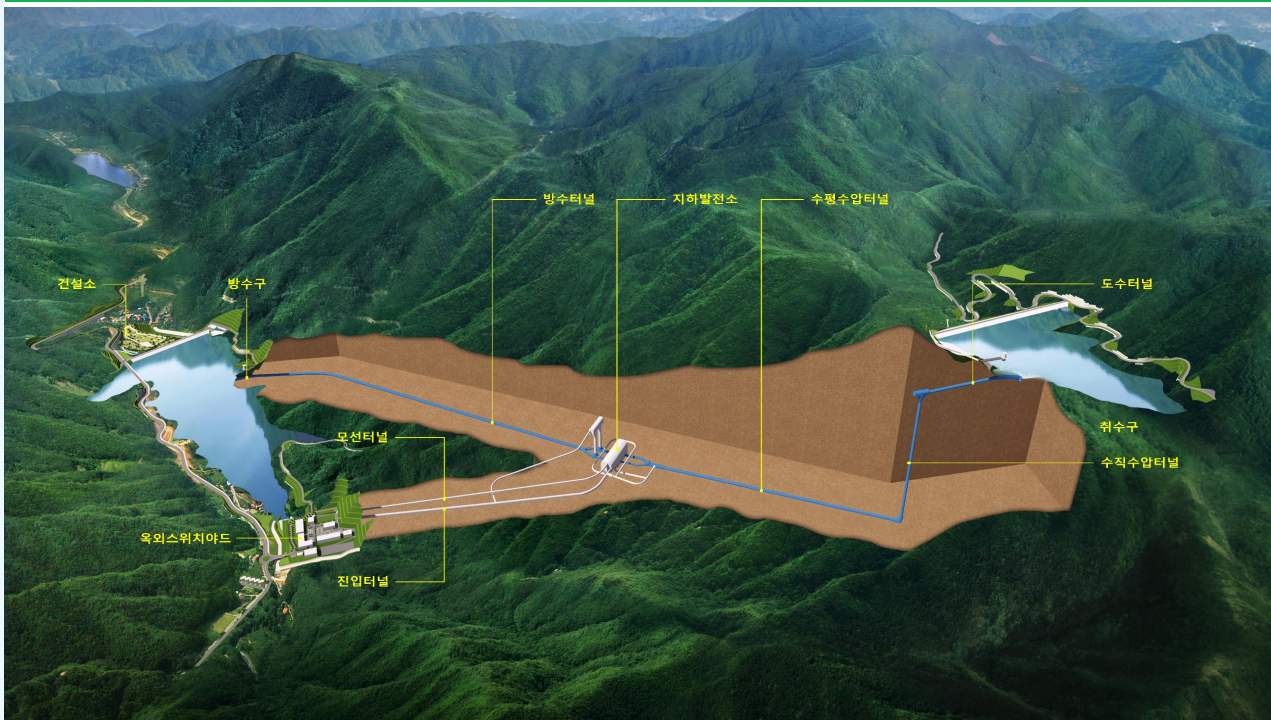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양강면 산막리 일원
부 지 면 적	1,052,117m ²
사 업 기 간	2024년 9월 ~ 2030년 12월 (착공 후 76개월)
사 업 시 행 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토건공사: DL이앤씨,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
총 사 업 비	13,377억원 (VAT 별도)
실 비 용 량	500MW (250MW × 2기)
주 요 시 설	- 발전시설(발전시설, 댐, 저수지, 취·방수구 등) - 선형시설 및 관리시설(여수로, 비상대응시설 등)
발 전 형 식	가변속 양수발전 ※ 모터-발전기 속도 조절을 통해 발전 및 양수시 출력을 조절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공사 조감도



영동양수 발전소 건설 개요

영동양수 발전소 부지



집단지주 발생 배경

수몰지역 (내천마 마을, 21세대)



집단지주 발생 배경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신규 양수 2.0GW 확정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8GW

영동, 흥천, 포천 선정('19)

신규양수발전소,
자율유치 공모 유치 신청, 선정
(영동 500MW, 흥천 600MW, 포천 700MW)

예정구역 지정 고시('23)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상촌면 고자리 일원

- 재생에너지 보안, 전력계통 안정화, 지역 상생형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최초 "자율유치" 방식 도입('19.3)
- 7개 예비후보지 중 4개 지자체가 최종 후보지 → 영동, 흥천, 포천 선정 "영동은 첫번째 자율유치, 14년만의 양수발전소"



과제

- 본 공사 착공('24.9월) 前, 수몰지역 주민 총 21세대 이주 필요
- 발전소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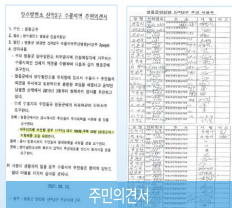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② (중략)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이해관계자 및 주요 쟁점



- ☑ 위원회 구성 및 활동('21년~현재)
 - 유○○ 위원장 등 3명
- ☑ 세대당 토지 300평, 주택 30평 제공 및 생계대책 요구('21년 5월~)



- ☑ [역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사업 추진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이주방안 마련
 - 발전소 공사 적기 착공
- ☑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협소, 주민과의 협상 어려움 예상
 - 본 공사 적기 착공 지연 우려



- ☑ [역할] 이주민 정착 지원 및 지역 협력활동
 - 이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 주민지원사업 협의 추진
- ☑ 이주대책위, 영동군에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속 요구
 - ※ 특별지원금으로 개별이주 지원 불가
- ☑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 ※ 건설기본계획에 포함(110억원 규모)

이해관계자 입장과 여건 차이로 집단 이주 적기 추진 어려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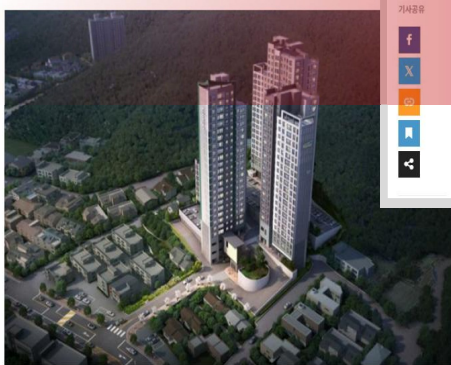
집단지주 추진 방안

영동군의 사정

충북 영동 최초 고층아파트, 랜드마크 프리미엄 '영동 코아루 리더스원' 1월 분양

최종서 기자 2023년 2월 8일
 입력 2022.12.27 09:13 수정 2023.02.08 14:04 기사원문

- 영동역 500m 이내 역세권에 조망권·프리미엄 확보한 23층 고층 아파트
-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3층, 3개 동, 전용 59~84㎡ 총 200가구



영동군 최초 고층아파트 코아루리더스원, 미분양 사태 희생양 되나

입력 2023.04.11 14:37 수정 2023.04.11 14:40 2023년 4월 11일

글자 크기 + - | | | |

충북 영동

정안발표
 다른기사 보기

기사공유



“올해 2월부터 준공중인 지상23층 규모 코아루리더스원 199세대 중 33건만 청약, 인프라와 시설 갖출에도 지역색 벗어나지 못해 “선분양보단 후분양 선호하는 지역정서 반영됐을 듯”

영동 최초의 23층 고층아파트로 높은 분양을 기대했던 '영동 코아루리더스원' 공동주택의 청약률이 16%대에 그쳤다. 영동을 동정리 일대에 준공 중인 코아루리더스원은 교통, 편의시설, 교육시설 등 인프라와 밀접성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체 199가구 중 33건만 청약이 들어와 청약경쟁률 1대1도 넘지 못해 아파트 미분양사태의 희생양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 한국토지신탁은 '영동 코아루리더스원'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일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지상23층, 3

**영동군 최초
 랜드마크 고층아파트
 미분양 사태**

집단지주 추진 방안

집단지주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

**기존 이주 방식
이주단지 조성**

- ✓ 이주단지 부지 확보,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 ✓ 법적 보상금을 상회하는 추가비용 주민 부담
- ✓ 민원·갈등 장기화 우려

**한수원, 주민 모두 행복하지 않은
이주사업이 될 가능성**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활용 방안 검토

사업 자원 구조 조정

- ✓ 주민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 * 건설 후 운영,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소요

**상생협력사업으로 전환,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 이주 지원 검토**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활용 및 사업 전환을 통한 자원 확보로



집단지주 추진 방안

1 이주대책협의회 적기 구성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신뢰 구축

이주대상 21세대 위임을 받은 주민대표를 포함,
최적 인원으로 구성(한수원 4,군 4,주민 3)

**2 기존과 다른 이주 방식
영동군과 주민 설득**

이주방식별 장·단점, 소요 비용, 공사 영향 등 설명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민 이주대책 합의서**

제1조 (목적)
본 협회서는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민들의 주거(주거) 및 생활의 편의(생활)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의사항)
본 협회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수원'과 '이주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밝힌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위')를 설립하고, 합의를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민, 관, 공 3자 협업을 통한 이주대책 합의('23.7.)

커뮤니티 건립사업을 상생협력금 사업으로 최종 변경('23.12.)
한수원 이사회 통과, 주거안정화 지원사업으로 46.2억원 주민 지원 약속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력 이행합의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수원'과 '영동군'은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업을 위한 '상생협력 이행합의서'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지역민들의 주거(주거) 및 생활의 편의(생활)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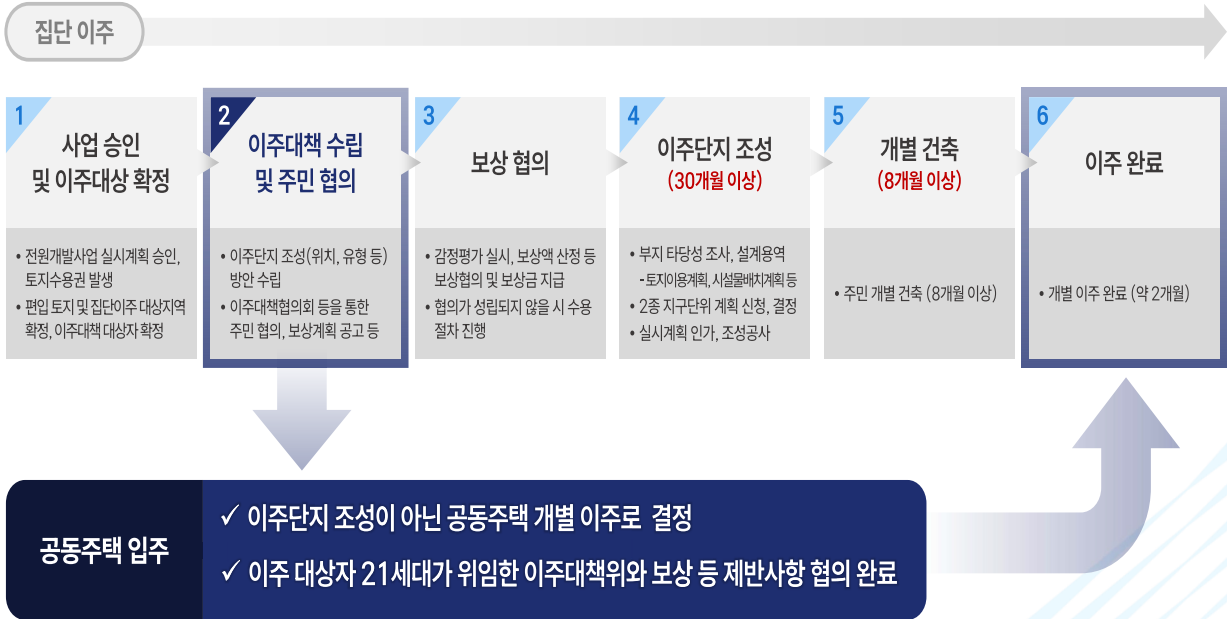
제1조 (목적)
본 협회서는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민들의 주거(주거) 및 생활의 편의(생활)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 (합의사항)
본 협회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수원'과 '이주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밝힌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위')를 설립하고, 합의를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 (이행합의)
본 협회서는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민들의 주거(주거) 및 생활의 편의(생활)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조 (이행합의)
본 협회서는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민들의 주거(주거) 및 생활의 편의(생활)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참고] 집단 이주 절차 VS 공동주택 입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집단이주 Win-Win 구조



한국수력원자력주

성공 요인 및 효과



한국수력원자력

성공 요인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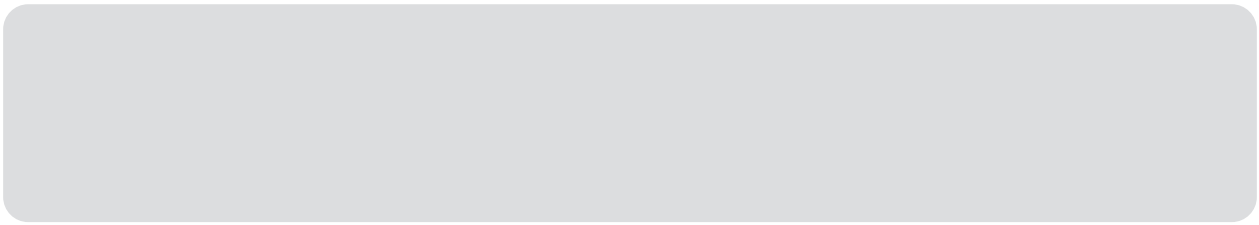
- 1 이주 소요기간 단축으로 **공사 적기 착공**, 사업비 절감
*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137억원 이상
- 2 고령 주민, 보상금과 이주지원비로 **우수한 정주 여건 확보**
- 3 건축 중인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4 후속 양수발전소 이주합의 시 **참조 사례** → 최단기 이주 협상 완료
- 홍천양수발전소 이주협상, 7개월만에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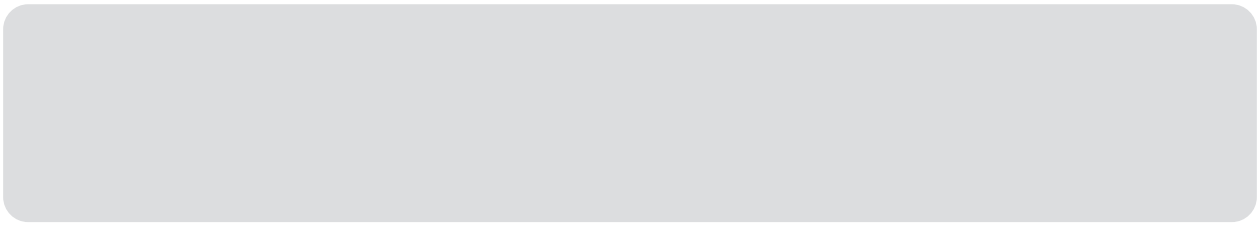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